

## 비대면 시대, 공공건축물 이용하기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복지시설 등의 공공건축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자 공적공간이다. 특히 교육·문화·체육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활편의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이 되기도 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 시설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건축의 조성과 개선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과 ‘생활 SOC’ 등의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통해 여건변화와 시민요구에 맞는 공공건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은 일상생활 속 공공건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을 금지하고자 수많은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이 문을 닫았고, 공공공간은 기피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보다 낮은 수준의 공간 문제, 유지관리비의 부담과 세금낭비에 대한 지적, 디지털 시대의 전환에 따른 일부 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이미 언론과 학계 등을 통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코로나19는 일부 공공건축의 존재 자체를 흔들었다. 즉,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공건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더구나 ‘생활 SOC’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이나 ‘공공건축특별법안’의 발의와 같은 공공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앞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고,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타인과 공유하는 공공공간의 필요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사람들 간의 소통부터 시작하여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 사회화나 공동체 교육을 위한 장소, 지역·계층 간의 통합과 연대 등 공익적인 이유로 공공공간으로서 공공건축은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서(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 공공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가치를 지닌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화한 모습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공건축은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장면 하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초기, 공부, 수업, 회의 등을 위해 카페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문을 닫은 도서관을 대신하여 공부를 하거나, 회사를 나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간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는 정부의 호소와 일부 시민의 비난에도 많은 사람들이 카페나 스터디 카페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카페를 찾은 사람들에게도 불가피한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집에 머무는 것을 어렵게 하였고, 집이 아닌 다른 공간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집중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또는 거주하는 공간이 좁거나 주거공간을 노출해야 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은 집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특히 급증한 1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27.9㎡)은 1인당 평균 주거면적(32.9㎡)보다도 작아서 재택근무나 비대면수업을 어렵게 만들었다(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장면 둘.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장마 등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은 특히 쪽방촌과 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한다. 일자리가 줄어서 생계

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폭염과 장마를 버티며 열악한 공간에 갇혀 지내도록 만들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한시라도 방에서 버티는 것을 힘들게 하였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 편히 창문을 열거나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자가격리 조치 어려운 일이었다.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준 일부 지자체의 사례도 있었으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들고 어려운 주거환경에 살고 있다.

1인가구와 저소득층 등의 주거환경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급여와 같은 주거비용을 지원하며, 에너지효율개선이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 중이다(복지로 서비스,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그러나 모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도 부족한 상황이다. 주거공간 자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대안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를 공공건축이 해결할 수는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공공건축을 이용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러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다. 공공건축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공간이지만 사유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면, 비대면 수업도 들을 수 있고, 화상회의도 참여하며, 무더위를 피해 안전하고 편하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은 열람실과 문헌정보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하나의 열린 공간을 기반으로 공간이 구성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공간의 일부를 한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의 닫힌 공간으로 분할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몇 시간씩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모든 공간이 타인에게 열려 있어서 닫혀져야만 하는 공공장소에 잠시 사유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언제나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단순히 벽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나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공적공간이면서 동시에 사적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공원 등 외부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페나 집이 아닌 ‘나의 공간’에서 비대면 수업을 자유롭게 듣고 업무도 보다 편하고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과 앱 등을 활용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건축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카페에 뒤쳐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기존에 공공도서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카페가 아닌 공공도서관이라는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의 점유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도서관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공건축에도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빌려줄 수도 있고, 바우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운영방식의 조정을 통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완전히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큰 공간 내에 작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는 대학도서관의 스터디룸,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은 공공공간이라는 틀에 갇혀서 개인에게 내줄 수 있는 공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요구 범위도 변하고 있으며, 공공이 조성하는 공공공간으로서 공공건축의 의미도 변할 수 밖에 없다. 기존 공공건축의 공간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건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